

세미나자료 2017-06

# 2017년 제5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신정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방향성 진단

일시 | 2017. 9. 5. (화) 14:00-16:00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7년 제5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 신정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방향성 진단

- 일시: 2017. 9. 5.(화) 14:00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3층 세미나실

---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

14:10~14:40   발표  
                  새 시대 · 새 정부의 유아교육 · 보육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임재택 | 부산대학교 교수

---

14:40~15:20   지정토론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성애 | 중앙대학교 교수

---

15:20~16:0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 2017년 제5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



**발표**

**새 시대 · 새 정부의 유아교육 · 보육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

임재택 | 부산대학교 교수



# 새 시대·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임재택 교수(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

새 시대·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의 주권은 아이에게 있고,  
유아교육·보육의 모든 이론과 실체는 아이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광화문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으로 탄생한 새 시대·새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 국민의 권리와 자유, 건강과 행복, 생명과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유아교육·보육 역시 국민 주권 시대정신이 보장되어야 한다. 새 시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보육은 민주공화국의 유아교육·보육이다. 대한민국 유아교육·보육의 주권은 아이에게 있고, 유아교육·보육의 모든 이론과 실체는 아이로부터 나온다."

이제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보육은 아이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리는 아이살림의 교육이어야 한다. 아이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도구나 인적 자본이 아니다. 아이는 부모나 여성의 소유물이나 대리만족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아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유아교사의 수업 대상도 아니고, 원장의 경영 대상도 아니며, 행정공무원이나 장학사의 관리감독 대상도 아니며, 교수나 연구자의 이론 적용과 연구 평가의 대상도 아니며, 정치인들의 득표 놀음의 대상은 더욱 아니다.

오로지 아이는 고귀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이고, 무한한 잠재능력을 지닌 창조 진화하는 '주체적 생명인'이다. 아이는 자신의 몸 마음 영혼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자생력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천지만물과 하나로 살아가는 공생력을 합친 생활력, 생명력을 지닌 생명인이고 존귀한 한울님이다. 대한민국 유아교육·보육은 오로지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키우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유아교육·보육은 민주공화국의 유아교육이 아니었다. 유아교육·보육의 주권은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있고, 모든 유아교육·보육 행위는 어른들의 편익으로부터 나왔다.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여성단체, 유아교사, 원장, 관련 교수 및 연구자, 장학사, 지자체와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정치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른들은 유아교육·보육을 빌미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말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은 병들어가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인구절벽의 시대를 가져온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이들은 과학과 학문과 이론과 법령으로 자라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天)의 햇볕과 공기, 땅(地)의 물과 곡식, 사람(人)의 사랑과 정성이 어우러진 생명의 기운으로 자라고 키워야 한다. 이 진리는 자연의 섭리[自然法]와 사람의 도리[良心法] 대로 수천 년을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오랜 가르침이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교실·수업·교사 중심 유아교육·보육”에서 “자연·놀이·아이 중심 유아교육·보육”으로 혁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새 시대·새 정부는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통해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 실현”을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과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해방 후 지금까지 누적된 ‘유보이원화의 제도는 일제, 유아교육·보육의 내용은 미제, 아이는 국산’이라는 유아교육·보육의 구조적 문제와 적폐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행복 세상,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람공동체 세상,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생명공동체 세상인 홍익인간·이화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과 탄핵정국을 넘어 탄생한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주인인 유아교육·보육, 어른 편익중심이 아닌 아이행복 중심으로 혁신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 새 시대·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유보혁신의 기초

인공지능과 생명(유전)공학의 발달은 인간과 사회를 생명공동체로 새롭게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의 산업노동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으므로 긴급하게 인간과 생명 중심의 새로운 사회질서와 생활양식을 형성해야 한다. 생명공학이 인간의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자연적 인간의 본질과 정체를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정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교육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된다.

인간과 사회의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정치와 교육의 혁신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주체로서 생명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인간교육과 함께 기계와 생명과 정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지식중심, 경쟁중심의 교육은 새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는 낡은 교육이다. 지식·기술교육과 함께 생명주체의 깊이와 자유에서 생명 전체의 하나 됨에 이르는 교육,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주체적 인간 교육, 상생과 공존, 정의와 평화의 생명공동체 교육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

식중심의 주입식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뒤떨어진 인간들을 양산할 뿐이다. 새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간들은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주체적 생명인들이며, 상생과 공존, 정의와 평화의 생명공동체를 실현하는 사랑과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입시경쟁교육에서 자유로운 유아교육·보육은 이제 지식중심의 낡은 교육에서 벗어나 주체적이며 공동체적인 생명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영유아 교육에서는 영유아들의 감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깨닫게 하는 체험교육, 개성을 살리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창의교육, 자연 속에서 함께 신명나게 뛰노는 놀이교육, 남의 아픔과 기쁨을 헤아리고 함께 느끼는 공감교육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된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래 지금까지 말로는 아동중심·놀이중심 유아교육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교사중심·수업중심 유아교육을 실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유아교육 흐름은 시대사회적 변화와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학문 과학 이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악화되어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관련 자료 증가와 연·월·주·일 교육계획안의 규격화·상세화로 교실·수업·교사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금의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되면서 마침내 "유아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다", "로봇유아교육, CCTV유아교육" 등을 거쳐 교실·수업·교사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의 극치에 이르러 있는 듯하다.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을 위해 물러나는 법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아이살림·생명살림을 위한 새 시대의 유아교육·보육은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아동중심·개인중심·지식중심의 유아교육·보육은 생명중심·공동체중심·체(몸)덕(마음)지(영혼, 열, 정신)중심 유아교육·보육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새 시대의 영유아교육과정은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더불어 살면서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머리가 시원하고(영혼, 열, 정신), 가슴이 편안하고(마음), 배가 따뜻한 혈기 왕성한(몸) 신명나는 아이를 길러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지금 불신·경쟁·규제·평가 중심의 유아교육·보육 현실에서 벗어나 믿음·상생·살림·돌봄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으로 전환하는 근본적 혁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유아교육·보육의 혁신을 통해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인구절벽시대(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를 넘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 기존의 유아교육·보육 제도와 내용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기존 유아교육·보육 제도와 내용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아니다' 이다. 지금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제도와 내용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지금 유아교육·보육은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보육이 아니라 그 정반대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를 말하면 자연생태계 파멸의 위기, 인류사회 공동체 붕괴의 위기 및 인간성 상실의 위기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200여개 나라들 중에서 위 세 가지 당면과제의 위기 상황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엄중한 사실은 관련된 분야 당면 위기의 심각성 정도를 정례적으로 수치로 발표하고 있는 34개 OECD 회원국들 간의 통계 수치가 잘 말해주고 있다. OECD 회원국들 간의 관련 분야의 통계 수치 비교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꼴지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늘, 땅,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로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은 유아교육 분야라고 비켜갈 수 있겠는가? 아기 잉태에서 취학 전까지의 태아·영아·유아들의 잉태, 태교, 출산, 수유, 육아, 교육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유아교육에서의 현실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위험사회가 되어 버렸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어진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초저출산 국가가 된지 오래 되었다. 2003년부터이다. 아이 안 낳는 것도 문제이지만 못 낳는 부부의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현실에 이른 것은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률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신혼부부의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넘어 3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결혼 적령기의 청춘 남녀들의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결혼 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으니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 출산 자녀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마련이다. 아이 둘이나 셋 낳을 수 있었는데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아이를 잘 낳아서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비롯한 공공육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육아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불편하다. 공공육아 시스템이 자본시장에 맡겨져 있다. 유아교육 시스템의 경우, 정부 부처가 양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는 당사자들이 즐겁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분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육아정책과 행정관리 시스템이 지극히 시장경제 논리이고 강압적인 통제 위주이고 전시적이고 통계수치 위주의 성과주의, 인증평가주의, 감시감독주의, 불신과 물증에 기초한 증거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마침내 CCTV 보육시스템을 낳게 된 것이다.

실현하지도 못할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정책을 선언한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가속화 시켰다. 마침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누리과정 예산 떠밀기 싸움판을 이어가면서 유아교육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모두 예산절감 방책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아이들을 둘러싼 부모, 유아교사, 원장, 장학사, 관련 공무원, 지자체, 중앙정부 사이를 이 전투구의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의 단면이 바로 CCTV 유아교육에 까지 이른 것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설치한 CCTV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유아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CCTV의 문제이다. 시설의 CCTV는 철거하면 되지만 어린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CCTV의 상처는 오래 갈 것이다. 유아교육 관련 직접 당사자인 부모, 유아교사, 원장의 마음에 새겨진 CCTV의 상처도 그리 쉽게 치유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CCTV식 육아현실의 끝을 가습기 살균제 만행으로 희생된 수백 명의 어린 영혼들에게서 바라보고 있다. 세월호 만행으로 희생된 꽃다운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의 넋을 바라보듯이 말이다.

아이들은 CCTV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키워야 한다. CCTV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CCTV 유아교육은 사도(邪道)이고, 양심 유아교육이 정도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의 CCTV 유아교육 현실은 사람의 욕심과 사심, 불신과 감시, 권위와 억압, 돈과 권력, 아이 말감과 시간 때움에서 나온 발상이지 결코 아이들을 받들어 모실 한울님으로 바라보고, 사랑과 정성과 기도와 믿음 즉 양심으로 아이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유아교육이다.

여러분은 얼마 전 이명박 정권에서 한 때 성행하다 사라진 로봇 유아교육을 기억할 것이다. 교육부 관료들과 유아교육학계의 소위 교수이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앞 다투어 칭송의 깃발을 들었던 로봇 유아교육은 로봇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잘 자란다는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된 것이었다. 강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이니 너도 나도 실천하던 로봇 유아교육은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진 듯하다. 이런 로봇 유아교육은 4대강 개발로 오염된 강물을 로봇 물고기로 정화한다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만큼이나 실소를 자아내는 어처구니없는 유아교육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되돌아

보면 CCTV 유아교육의 불씨가 로봇 유아교육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 아닌가 싶다.

한편 누리과정의 도입은 무상교육 논쟁 못지않게 "유아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다"는 교사주도 수업식 유아교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유아교육학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학문적 뒷받침 하에 진행된 누리과정에 따른 수업식 유아교육은 초등학교보다 더 교사 주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놀이중심 유아교육이 하루아침에 수업중심 유아교육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바뀐 이론적 · 실증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관련 유아교육인사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중심 유아교육보다 수업중심 유아교육을 정말 원하던가를 묻고 싶다.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제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양심 유아교육의 실천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CCTV가 사라지는 생태유아교육의 실현을 이루어내야 한다.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에서는 매일 아침 큰 절과 호흡과 명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생태유아교육 실천운동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잃어버린 사랑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되찾는 유아교육의 정도를 찾고자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에 CCTV 없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양심 유아교육 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과 속에 든 씨앗의 수는 누구나 셀 수 있지만 씨앗에 든 사과의 수는 아무도 셀 수 없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한울님인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에서 일러주듯이 우리 아이들은 하느님으로부터 큰 사랑(大德)과 큰 지혜(大慧)와 큰 능력(大力)을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 머릿골 뇌(腦)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씨울'이기에 우리가 사랑과 정성과 믿음과 기도로 얼마나 잘 모시고 섬기고 가르치느냐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는 큰 사람이 되느냐가 달려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홍익인간으로 길러야 한다. 홍익인간의 아이 모습은 신명나는 아이다. 홍익인간이 모여 이화세계를 꾸리듯이 신명나는 아이들이 자라 신명나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생태유아교육의 이념이고 꿈과 희망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은 학문이나 과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살고, 지식과 정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치와 지혜로 사는 것이다. 아이 키우는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다. 아이는 학문이나 과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키우고, 지식과 정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개구쟁이처럼 잘 놀 수 있도록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는 이치와 지혜로 키우는 것이다. 자연을 안내자로 삼는 한 자연은 결코 길을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의 안내 하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수 없다.

생태유아교육에서는 자연은 아이들에게 큰 머리를 가르쳐주나 사람은 아이들에게

잔 머리를 가르쳐준다는 이치와 지혜를 믿고 이를 실천해왔다. 도올 김용옥 선생으로부터 이를 입증해주는 귀한 선물을 받았다. "人養人 不如 天地養人 上善若水而也" 이 글귀는 저가 지난 2016년 2월 23일 우리나라의 '혼돈의 육아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正道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도올 선생을 찾아뵙고,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기조발제 수락과 함께 받은 귀한 선물이다.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천지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 맑은 물이 흐르듯 최선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을 살리고, 사람공동체도 살리고, 자연생태계도 살리는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의 이치와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을 아프게 하는 '나쁜(나쁜인)' 학문, 과학, 교육은 물러나고 이제 아이들과 모든 생명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좋은(조화로운)' 학문, 과학,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 나쁘다고 하고,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과 만물에게도 좋은 것은 좋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쁜 학문, 나쁜 과학이 우세했기에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연생태계가 망가져가고 인간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유아교육 역시 아이들과 천지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지 못하는 유아교육은 결코 좋은 유아교육이 아니다. 이제 나쁜 유아교육은 물러나야 한다.

##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을 아프게 하는 기존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

독의 홍수 시대, 생명위기 시대, 가장 시급한 일은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다. 우선 아이들 몸 마음 영혼에 쌓인 독을 없애주는 제독·해독하는 일과 그들의 몸 마음 영혼에 독이 쌓이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몸 마음 영혼이 깨끗한 신명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한다. 아이들이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바깥에서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자라는 놀이중심, 생활중심의 자연산 유아교육이 그 해답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다'는 구호를 내걸고 장시간 아이들을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실에 가두어두고 오전에 정규 수업하고 오후에 특별활동 공부하는 '양계닭식 유아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요하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양계닭식 유아교육과정'은 아이들의 면역력, 자연치유력, 생명력을 떨어뜨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이죽임·생명죽임의 유아교육으로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유아교육이 좀 더 오래 지속되면 우리나라에는 '잔혹 동시' 한 두 편씩을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할 것이다.

아이들은 과학과 학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자

란다. 아이들은 유아교육학이나 발달심리학이라는 학문과 과학의 이론으로 만들어낸 영유아보육·교육과정에 의해 성장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천지인의 기운으로 자라는 법이다. 아이들은 하늘이 주는 햇볕과 공기, 땅이 주는 물과 곡식, 사람이 주는 사랑과 정성과 믿음과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은 CCTV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원장과 교사와 부모들의 양심이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교실의 의자부터 없애야 한다. 아이들의 의자는 닭 2마리를 가두어 둔 양계장의 A4용지 한 장 크기 케이지와 같다. 아이들은 지금 의자에서 벗어나고, 교실에서 탈출해야 한다. 교실의 흥미영역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플라스틱 교구도 없애고, 자유도 없고 선택도 없는 자유선택활동도 없애야 한다. 일일교육계획안은 생활교육일지로 대체해야 한다. 아이들을 교실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햇볕과 바람과 숲이 우거진 자연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제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는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인 생태유아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루 한시가 급하다.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몸 마음 영혼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자유와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을 병들게 하는 기존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자연의 섭리와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기존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저항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동차 수리 센터는 자동차를 완전히 고쳐주어야 돈을 받는다. 만약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고치거나 환불을 받는다. 불량 유아교육에 대한 소비자 고발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숲유치원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고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저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을 콘크리트 유치원·어린이집에 가두어 키우는 것은 선업(善業)이 아니라 악업(惡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숲유치원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는 어린 아이들을 콘크리트 유치원·어린이집에 가두어 몸 마음 영혼을 병들게 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기존 유아교육 행태에 대한 경고이고, 콘크리트 유치원·어린이집 방식의 가두기식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유행이 아니라 1969년 최초의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래 지난 40-50년 간 학문 발전에 맞춰 수차례 개정된 국가수준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두어 키운 폐해로 드러난 병든 아이들의 실상에서 연유한 필연적 결과이며 시대사회적 추세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콘크리트 유치원에서 '양계닭식 유아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토종닭식 유아교육'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저항운동이 어린 아이를 가진 학부모

들을 중심으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을 살리는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4차 산업혁명시대 유아교육·보육의 바람직한 모습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속내를 알게 되고, 나름대로 이치를 깨닫기도 한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속내를 '아는 것, 앎'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 깨달음'이야말로 삶의 보배로운 등불이다. 앎과 깨달음,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삶의 길을 멀리까지 올바르게 비춰주는 밝은 등불은 말할 나위도 없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앎에만 매달리면, 삶은 뜬구름같이 가벼워지고 말 것이다. 알찬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한다.

'알다'는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겪으며 키울 수 있다. 한마디로 부지런히 배워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다'에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깨닫다'는 부지런히 배운다고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깨우침을 쌓아 가면 언젠가는 깨침에 이르고, 깨침을 거듭 쌓다 보면 어느 날 느닷없이 깨달음을 얻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앎에서 깨우침, 깨침의 단계를 거쳐 깨달음에 이른다. 깨달음은 뇌를 이용해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며, 전체를 위하여 몸으로 터득하며 쌓아가는 삶의 경험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결코 믿음에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

또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생각에는 자연만물을 탐구하는 과학적인 추리와 하늘(하느님)과 소통하고 연락하는 영감(靈感)이 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하늘로 솟아올라가듯이, 사람은 평면적인 추리를 하다가 영감에 이른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인 열이 있어 하느님과 소통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땅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고 하늘과도 통해 천지인합일을 이룬다. 생각하는 사람은 땅과 통해서 물질적 지식을 얻고, 사람과 통해서 양심적 지식을 얻고, 하늘과 통해서 영적 지식을 얻는다. 또한 물질적 지식, 과학적 지식, 몸의 지식은 배꼽 아래의 물적 영역으로 현상계에 한정된 지식이다. 반면 양심적 지식, 영적 지식, 마음·영혼의 지식은 배꼽 위의 정신적 영역으로 절대계와 현상계를 모두 아우르는 지식이다. 양심적 지식과 영적 지식을 알고 실천하는 교사나 부모는 아이들을 양심적이고 영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사람의 몸 마음 영혼에서 땅의 물질적 속성을 지닌 몸은 물질적 지식, 과학적 지식의 영역으로 앎의 대상이지만 하늘의 정신적 속성을 지닌 마음과 영혼은 정신적 지식, 영적 지식의 영역으로 직관과 영감과 깨달음의 대상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위

학문, 과학, 교육의 이름으로 다루는 지식은 물질적 지식으로써 오감을 통해 인식의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지식으로 인정하고, 이런 과학적 지식에 주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여 종교나 철학의 영역으로 취급하여 앎의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유아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에서는 마음이나 영혼에 관한 정신적 지식과 영적 지식을 등한시하거나 아예 관심 밖에 두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최근 창의성교육,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마음과 영혼의 영역인 인성과 창의성, 감성과 영성, 양심과 신성, 참나와 슈퍼의식 등을 직관과 깨달음과 몰입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정신적 지식, 양심적 지식, 영적 지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을 오감과 이성을 통한 물질적 지식 획득의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엄청난 모순과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생태유아교육에서는 아이를 주체적 생명인, 한울님으로 본다. 아이는 하느님의 속성인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그대로 내려 받아 아이의 뇌에 지니고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따르고 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의 무한한 잠재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사랑[德· 마음· 가슴]과 무한한 지혜[智· 영혼· 머리]와 무한한 능력[體· 몸· 배]에 바탕을 둔 유아교육을 지향한다. 이런 능력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전지전능(全知全能), 유교에서 말하는 인(仁)과 양지양능(良知良能)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주류 유아교육계에서는 제2차 산업혁명의 기계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발전과 어린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아이들을 고귀한 인격체나 주체적 생명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기능인 내지 인력(人力)을 넘어 인적자본(人的資本)으로 보고,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를 교육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기조는 지식정보혁명의 제3차 산업혁명을 지나 인공지능과 생명유전공학의 발달로 인간과 사회를 생명공동체로 새롭게 형성할 것을 요구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인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생존경쟁의 도구와 사회구조의 기능으로 작동하는 교육시스템이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시행 이후 점차 강화되어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히는 교육내용과 주제와 활동의 획일화, 시간과 공간과 교재교구의 구조화, 기관과 교사와 아이들의 관리 감독과 비교 평가의 강제화 등으로 인해 지금의 유아교육·보육 현실을 바라보면 참담함을 넘어 비애감마저 느껴진다.

## 새 시대 · 새 정부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

1.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사회 삶과 일자리를 바라보며 이에 대비한 새로운 영유아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의 획일화된 유아교육·보육과정 정책은 다양화 정책으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새 시대·새 정부의 지방분권시대에 합당한 중앙정부 주도형 교육과정 개발 정책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 개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다양한 영유아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

2. 1969년 최초의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래 현행 누리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40-50년간 유지되어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중앙집권적 국정교과서·지도서식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 획일화 체제를 검증된 여러 가지 영유아보육·교육과정(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방식의 분권형 다양화 체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국정교과서·지도서 체제인 만 3-5세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생태유아교육, 숲유치원교육, 공동육아교육, 발도르프 유아교육, 레지오에밀리아 유아교육, 몬테소리 유아교육, 장애아 통합유아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3.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3-5세 누리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검증된 영유아보육·교육 프로그램은 가칭 영유아보육·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분권형 다양화 체제에서는 국가수준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수준을 제시하는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현행 3-5세 누리교육과정의 5개 영역, 20개 내용 범주, 62개 내용 범주별 내용 수준 정도만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간략한 해설서를 포함해서 전체 50쪽 전후의 분량으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해볼 수 있다.

5. 국가수준의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영유아들의 감성과 영성, 상상력과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교육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넘어 모든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과 삶의 지원이라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6.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가 실현되면,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할 수 있으나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기존의 누리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기존대로 활용하고 유치원 평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으면 된다.

7. 지금의 획일화된 누리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운영 체제에서 생태유아교육, 숲유치원교육, 공동육아교육, 발도르프 유아교육, 레지오에밀리아 유아교육, 몬테소리 유아교육, 장애아 통합유아교육 등을 허용하여 누리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가 이루어지면 그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최고 억압수단으로 작동해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스템에 일대 변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어느 시설이 우리 아이들의 몸 마음 영혼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다.

8.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 건강과 행복한 삶에 부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주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 정책은 2018년 3월 시범 시행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에 가칭 "영유아보육·교육과정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자료집 제작 등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을 계획 실행해야 할 것이다.

10. 영유아보육·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 정책이 실현되면, 유아교사 양성 및 연수과정의 변화는 물론 유치원교사 임용고시의 시험 유형도 달라질 수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통제 행정체제에서 신뢰·지원행정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교실·수업·교사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이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으로 전환되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은 물론 아동학대 사례가 줄어들고, 아이 교사 원장 학부모 간의 신뢰 분위기가 점차 회복되어 수년 내 CCTV교육·보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1] 문재인정부의 유아교육 · 보육분야 국정과제

1.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2. 5대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 20대 국정전략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4대복합· 혁신과제 : '교육· 노동· 복지체계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4. 100대 국정과제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10대 보육과제'

[보육과제①]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아동수당 10만 원

올해부터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출산지원금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2018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한다. 또한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올린다. 20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를 통해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보육과제②]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보육과제③]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올해 25%에서 2022년 40%까지 높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여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의 질을 균등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자격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한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보육과제④】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임대주택 20만 호, 전체의 3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인다. 그리고 2018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을 실시한다.

**【보육과제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하고, 포괄임금제를 규제한다.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질병·사고·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추진한다.

**【보육과제⑥】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 예외 삭제**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그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센터를 현행 150개소에서 175개소까지 늘리고,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보육과제⑦】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체계**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업무를 연계·통합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리고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시범운영한다.

**【보육과제⑧】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 한부모 양육비 인상**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를 도입하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를 개선한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육과제⑨】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1,250억 원을 투입해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한다. 또한 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지원대책을 올해 중 마련한다. 2030년까지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 7000종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인체직접적용제품 3000건의 독성DB를 구축한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급식지

원센터를 설치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보육과제⑩]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어린이 맞춤형대책**

올해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을 일시중단하고 신규 건설을 불허한다. 2022년까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한다. 20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며, 20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디젤기관차 배출기준을 강화한다. 민감계층인 노인·어린이에게는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참고자료2]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53개 단체]의

『새 시대·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혁신 방안』 제안

## **[유아교육·보육 혁신의 이념 및 방향]**

### **1. 홍익인간 이념 실현**

우리는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아교육·보육을 지향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추구하고 한국사회의 공동체, 나아가 공동선(共同善)을 구축하는데 힘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간형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보육 대상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하는 데 매진한다.

### **2. 공동체 중심의 교육 지향**

지금의 개인중심·경쟁중심의 한국 유아교육·보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아이들의 생명과 행복을 실현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공동체’를 만들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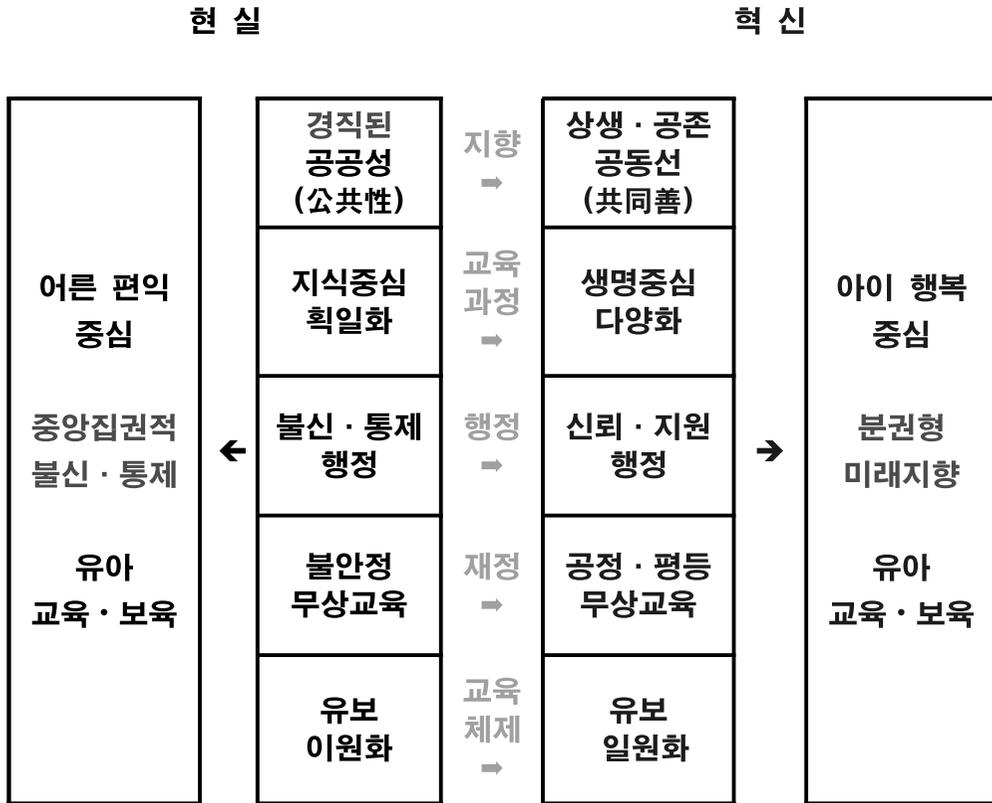
### **3. 분권형 교육 운영 지향**

분권(分權)의 가치가 중요하다. 유아교육·보육도 이제 분권형 교육운영으로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지방의 권력을 주민에게, 일방이 아닌 쌍방향, 치우침이 없는 균형을 말하는 국가적·시대적 과제이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분권형 유아교육·보육으로 아이들을 웃게 해야 한다.

### **4. 영유아교육 평등권 보장**

민주주의는 공정함과 평등을 먹고 자라는 나무이다. 사랑받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에게 금수저·은수저를 던져주어선 안 된다. 지위나 신분이 무엇이든, 어디에서 어떤 것을 배우든, 출신이 어디든 아이들은 똑같이 소중하다. 유아교육·보육의 평등권은 민주주의 나무의 뿌리이다.

## [유아교육·보육 혁신의 5개 영역 혁신과제 개념도]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이하 유보혁신연대)는 오늘날 한국 유아교육·보육의 제반 문제점과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를 만들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를 건설하고자 5개 영역의 혁신 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효과를 진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향후 대선 과정에서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보육 관계자, 관련 단체 및 학회, 시민사회, 관심 있는 개인이 함께 손잡고 해방 후 지금까지 누적된 유아교육·보육의 적폐를 혁신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함께 만들고 다 함께 실현시켜 아이행복세상을 만들어 내하고자 한다.

## **[유아교육·보육 5개 영역 혁신과제 요약]**

5개 영역 혁신과제 실현을 위한 추진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협동 「유아교육·보육혁신위원회」 설치 운영

### **□ 영역 1. [ 지향 ] :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넘어 공동선(共同善) 지향 : 공정하고 평등한 유아교육·보육의 실현**

한국의 유아교육·보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유아교육·보육의 실현

1. 모든 영유아들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평등교육을 보장하는 『영유아교육법』 제정
  - 시설유형에 따른 차별 없는 무상유아교육·보육 실현
  - 장애아 및 다문화 아동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에 대한 개별화 지원
2. 인구절벽시대 현실성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방안의 모색 및 유보통합 일원화 체제 정비 후 원아 수급계획에 따른 국공립 시설의 안정적 확충
  - 현실성 있는 국공립 확충 방안으로 학생 수가 감소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나 학교 부지 활용,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화, 민간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음(서울시 사례).
  - 지금의 유보일원화 체제로 인한 원아 수급 불안정과 국공립과 민간 시설 불균형 현상은 유보통합 일원화 체제 정비 후 원아 수급계획에 따른 국공립 시설 중심의 안정적 확충
3. 영유아의 건강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
  - 영유아시기 과도한 학습부담 제한 : 영아 특별활동 금지, 유아 특별활동 제한
  - 의식주 생활, 비만 등의 해결 방안 모색 :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영유아 자연건강 증진, 영유아 유해환경 개선
4.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출산육아교육지원법』 제정

### **□ 영역 2. 교육과정 : 유아교육·보육과정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아이로 키우자**

영유아 때부터 지식·정보 위주의 교실·수업·교사중심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교육적 상상력이 제약되고 있음

1. 현행 지식중심의 획일화된 중앙집권형 유아교육·보육과정을 생명중심의 다양화된 분권형 유아교육·보육과정으로 혁신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2. 현행 유아교육·보육과정 내용의 최소화 및 기본지침 기능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개정

3. 유아교육·보육과정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 및 아이행복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을 저해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 수준의 혁신
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보육과정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 강화
5. 기존의 '교실·수업·교사 중심 유아교육·보육'에서 '자연·놀이·아이 중심 유아교육·보육'으로 혁신
6. 산림청·지자체의 유아숲체험원(장)·유아동네숲터 개발 보급 및 유아숲지도사 등 보조인력 배치

**□ 영역 3. [ 행정 ] : 불신·규제위주 정책에서 신뢰·지원위주 정책으로 :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 실현**

불신과 경쟁, 규제와 평가 위주의 유아교육·보육 정책기조를 신뢰와 상생, 지원과 컨설팅 위주의 유아교육·보육 정책기조로 근본적 전환

1. 유아교육·보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서위주의 평가제도와 각종 서면 점검 개선
2. 서로 믿고 배려하는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 실현
3. 규제만이 문제해결의 최선이 아니므로 유아교육·보육 현실과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상충되는 법령과 제도를 단순화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
4. 현재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작성·보고하는 불필요한 문서의 폐지, 보관해야 할 문서의 종류와 양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간소화
5.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 안정된 직장,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사립기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민간·사립기관에 적합한 회계제도로 개선.
6. 영유아 교육·보육부문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억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교권과 인격권 보장을 위한 대책과 제도 마련

**□ 영역 4. [ 재정 ] : 시설유형간 차별 없는 동등한 영유아 무상교육 실현! 모든 아이, 교사, 부모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영유아교육 실현**

정부의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 확보와 평등한 지원이 필요함

1.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평등한 정부 예산 지원
2.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들에 대한 평등한 정부예산 지원
3.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

리 30만개를 재창출할 수 있음

- 국공립 및 사립·민간 시설의 유아교사에 대한 평등한 인건비 지원
  - 교육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유아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지원
  - 8시간 이상 근무 비담임 교원 임용보장과 방과후 대체교사 지원(근무시간)
4. 출산·육아·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공적기금 조성을 통한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
5. “출산·영유아교육 지방재정 교부금”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보육세”의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영역 5. [ 교육체제 ] : 현행 유보이원화 체제를 유보통합 일원화 체제로 개편 : 영유아교육법 제정**

현행 유보이원화 체제는 해방 후 지금까지 누적된 유아교육·보육의 적폐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이며, 혁신해야 할 시대사회적 당면과제임

1.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유보통합 일원화 하는 『영유아교육법』 제정
2. 유보통합 관할부처를 교육부로 하고, 교육부에 ‘영유아교육지원국’ 신설
3. 영유아 교육비 및 유아교사 인건비 동일지원을 위한 『영유아교육법』 제정
  - 모든 교사에 대한 차별 없는 동등한 처우보장, 유아교사의 8시간 근무제 보장
  - 시간외 수당, 휴가 및 유아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참고자료3]

[한겨레신문 2017년 6월 15일자 기고문 : 교육적폐, 국정화된 누리과정]

≡ 한겨레

① [기고] 교육적폐, 국정화된 누리과정 / 임재택 ②



**임재택**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부산대 명예교수(유아교육)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가 국사교과서 국정화였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적폐는 유아교육을 획일화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유아 보육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획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강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아무리 좋고 바합직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시행할 수 없으니, 누리교육과정의 국정화였다.

게다가 정부 누리교육과정은 하루 중의 아이들을 비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수월성처럼 주입식으로 가르치도록 한다. 교사는 13권에 이르는 교사용 지도서와 시디(CD)에 따라 아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교육 및 보육계획안을 연간, 월간, 주간 단위로 작성하고, 하루 A4 용지 5장 분량의 일일 교육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나마만 300여명에 달하는 평가지표를 통과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한창 스킨십이 필요한 아이들을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 줄 수 없고, 아이들은 놀이와 활동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충족시키며 각자 나름의 잠재력을 키울 수 없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규격화된 상품처럼 만들어진다.

그 결과는 끔찍하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사람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와 더 붙어 이런 획일화된 억압적 교육과정에서 비롯됐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으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갑질에 치인 교사도 마한가지다. 교사나 아이들의 충돌은 피하기 힘들다. 평가를 강화하고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유아교육 보육의 주인은 아니다. 유아교육 보육의 모든 이론과 실체는 아이에게서 나와야 한다. 아이는 교실 밖으로, 놀이터로 강이나 숲으로 나가야 한다. 설사 누리교육과정 수립을 하더라도 강과 숲과 놀이터에서 해야 한다. 게다가 획일화돼 있다 보니, 이미 걸출된 신탄 유아교육, 숲유치원교육, 공동육아교육, 발드르프 유아교육, 레조에밀리아 유아교육, 몬테소리 유아교육, 장애아 통합 유아교육을 할 수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운영 목적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있다. 한창 누리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양계장식' 교육과 보육, 하루 12시간씩 '가두리 양식장식'으로 실시하는 실내보육, 교실 수업 교사 중심의 유아교육으로는 이를 수 없는 목표다.

이제 중앙집권체제의 획일화된 누리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권 체제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최고 억압 수단으로 작동해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스템도 바뀌게 될 것이다. 행정편의의 종래의 평가인증 판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경쟁력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적폐 해소 1호가 국경 국사교과서 폐기였다면, 2호는 국정체제로 획일화된 누리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아교육 현장이 일일 교육계획안에 매달리지 않고, 300여명에 달하는 평가지표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이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나 폐회로탈레비전(CCTV) 감시, 통제, 평가, 불신, 경정인 사라진 새로운 유치원 어린이집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새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덕불어 신명 나는 아이, 신명 나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세상, 결혼 기피층 출산 기피층이 사라진 인구절벽 시대에서 활출하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유아교육 · 보육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어른편의 중심에서 아이행복 중심으로 / 중앙집권 방식에서 지방분권 방식으로

**임재택(유보혁신연대 상임대표) - 유보혁신의 시작 : 누리 교육과정의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 유보혁신의 완성 : 유보통합 일원화 실현**



『한겨레 부산 주주·독자클럽』이 광주를 찾아갑니다. 오는 8월 23일 부산대학교 임재택 명예교수를 모시고 유아교육·보육혁신에 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새 시대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는 임 교수는 획일화된 누리 교육 과정의 다양화와 유보통합 일원화 실현방안에 대한 고민을 광주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보육 혁신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부산 주주·독자클럽』은 2015년부터 매일 한 차례 포럼을 열고, 자발적으로 '한겨레 독자 놀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부산지역 한겨레 주주·독자 커뮤니티입니다.

- 한겨레신문 6매독운동 부산 주주·독자 클럽(대표 서금성 010-4554-7742) -

※『부산 주주독자클럽』 8월 모임은 광주 강연회로 대체합니다.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서금성회장에게 연락하십시오.

\* 강연당 내 후원카드결제만 있으니 가급적 대외교통을 이용하십시오.

**지역순회 강연회 - 광주**

◇ 8월 23일 (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석홀(4층)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유보혁신연대 상임대표  
서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

◇ 주최 : 한겨레 부산주주독자클럽



## 기고

## 새 시대·새 정부의 유아교육 혁신 방안



**임재택**  
유보혁신연대 상임대표  
부산대 명예교수

국민이 주인인 새 시대·새 정부에서 유아교육·보육의 주인은 아이다. 유아교육·보육의 모든 이분과 실체는 아이에게서 나와야 한다. 아이는 고귀한 생명을 지닌 주체적 생명인이다. 아이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도구나 인적 자원이 아니다. 아이는 부모나 여성의 소유물이나 대한민국적 대상도 아니다. 또한, 아이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사의 수업 대상도 아니고, 원장의 경영 대상도 아니며, 행정공무원이나 장학사의 관리감독 대상도 아

니고, 교수나 연구자의 이론 적용과 연구 평가의 대상도 아니며, 정치인들의 득표 논쟁의 대상은 더욱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민주화과정의 유아교육이 아니었다. 유아교육의 주권은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있고, 모든 유아교육 행위는 어른들의 편익으로부터 나왔다. 그 폐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누리과정 시행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났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고 평가 인준을 강화했다. 누리과정 시행 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교사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은 확연히 달라졌다. 학부모는 신바람이 났고 원장·교사는 죽을 맛이다. 그 사이엔 아이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아이들은 국정체제의 획일화된 누리교육과정이 따른 장시간 교실 수업과 아동학대에 가

까운 기다리 양식장식 받고 후 특별활동과 야간 돌봄 과정에 시달리면서 몸 마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

새 시대·새 정부는 유아교육의 주권은 아이들에게 되찾아주는 유아교육 혁신을 해야 한다. 새 정부 유아교육 혁신의 첫 단추는 국정체제의 획일화된 누리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다인화와 운영의 자율화를 허용하는 것이고, 유아교육 혁신의 완성은 유보통합 실현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는 교육내용 혁신이고, 후자는 교육제도 혁신이다.

내용 혁신은 현재의 누리교육과정은 물론 검증된 생태유아교육, 숲유치원교육, 공동육아교육, 발도르프 유아교육 등도 허용하면 된다.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어느 시선이 아이들을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가로 경쟁하면 된다. 국민들은 아이가 주인이 되고 교사·

원장이 교육자의 자리를 되찾는 유아교육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제도 혁신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대선공약에서 시작된 유보통합 논쟁은 20년 후 새 정부에서 마무리하면 된다. 당시 72만 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지금 40만 명으로 줄어 들었다. 유아교육·보육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당시 유보통합 실현과 공약을 이행했다더라면 오는 같은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황폐화와 인구절벽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거쳤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보통합은 여야 4당의 대선공약 내지 합의 사항이므로 협치 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보통합 문제는 선 부처통합, 후 업무조정을 해 나가면 된다. 새 정부가 앞세워 현재 청산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유아교육·보육혁신특구」 시범사업(안)

## 1 시범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새 시대·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혁신 모델의 개발·적용을 통한 유보통합 일원화 실현 방안 모색
- 2018년 3월 개원 예정인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을 계기로 해운대구 및 해운대교육지원청 관할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유아교육·보육혁신특구」 시범사업 지정 요청
- 기존의 중앙집권형 유보통합 접근 방식(Top-Down)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형 유보통합 접근 방식(Bottom-Up)으로 변화

## 2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







## 토론

---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성애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새 시대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1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정책 수행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중에 드러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 기저를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근원을 짚는 작업은 정책의 발전과 방향성의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2012-13년 도입된 공통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과 지원체계로서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정책은 육아와 취학전 교육·보육 주요 주체들의 관점과 수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낳았다. 이러한 변화가 축적되어 있는 현 시점의 육아와 교육·보육의 실태와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를 통해 지적한대로 그 간의 누리과정 커리큘럼과 이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체계가 과연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놓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성과와 답변만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발표자의 의견대로 영유아를 수업의 대상이자 지원의 대상으로, 영유아보다는 성인의 관점에서 인적자본으로 접근한 측면이 없지 않았음을 공감하는 바이다.

3-5세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함이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중 하나가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목표와 편성·운영 기준, 교수학습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운영 지침으로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 및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놀이를 중심으로 하며, 영유아의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고, 실내·외 활동과 정적·동적 활동, 집단활동과 개별활동 및 휴식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유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누리과정의 지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논의된 비판적 접근을 수용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리과정 영역별로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주제 중심의 활동들을 이어가고 매일의 과정에서 계획안의 마련과 관련 평가를 적용하는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보육 외에 각종 서류작업, 평가(인증), 부모 및 개별 영유아의 요구 등 많은 업무에 교사들이 소진되고 교육보육 활동에 집중

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유아교육과 보육계는 깊이 인지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CCTV가 설치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비판적 논의들이 있었으며, 그 속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뿐 만 아니라 교사의 권익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여왔다.

누리과정의 다양화와 지방정부에 의한 정책 운영과 질 관리, 주요 프로그램(예: 생태유아교육, 숲 유치원 교육, 공동육아, 발도르프, 레지오 에밀리아, 몬테소리, 장애아 통합 교육 등)의 적용 역시 공유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하고 적용해나갈 것인가의 공통의 고민과 숙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국가수준의 교육보육 과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현재보다 단순화 하고 특정한 접근에 국한되지 않는 것, 교실의 영역 구성을 줄이고 플라스틱 교구를 지양하며 아이들이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하도록 하는 것, 자유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유선택 활동을 비판하고, 일일교육계획안의 실제 적용성을 보완하며, 그리고 통제에서 신뢰와 지원의 체제로 전환하고, 아이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평등권을 중시하고 교직원의 교권과 인격을 존중하자는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하며 제안들을 경청한다. 나아가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히는 교육내용, 주제와 활동의 획일화, 시공간과 교재교구의 구조화, 관리감독의 강화 등으로 비판되는 현재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의견도 경청한다.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경험과 성장을 위해, 교육보육에 대한 질 관리의 모니터링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 제고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무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교육보육의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이다. 발표자가 지적한대로 질 관리 모니터링의 수행이 지나친 외부 평가와 점점 위주로 교사 본연의 교육보육과정 수행을 제한하고, 미래지향적인 누리과정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관유형 간 차별적 요소들을 최소화 하며 공공성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교육과 보육은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과정이 되도록 혁신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비판적 견해와 다양한 제안에 기초한다. 그 간에 드러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제기와 관련 정책의 설계, 주어진 현상에서의 변화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의 목표와 방향성, 현장에서의 운영기준과 지침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교사의 주도성(**initiative**)을 보장하는 누리과정으로 안착되도록 제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누리과정을 비롯하여 교육보육의 정책이 다양성과 자율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확장하는 다음 단계의 비계 설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과 보육을 지탱하는 이론적 토대와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져 이후 교육보육의 발전에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새 시대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2**

지성애(중앙대학교 교수)